

행 정 법

1. 법치행정의 원리(法治行政의 原理)의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의회가 정립하는 법률만이 시원적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다.
- ②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유보(法律의 留保)에 대하여 본질성 유보설(중요사항 유보설)을 취하고 있다.
- ③ 의회유보론은 위임금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의회법률(議會法律)이라는 형식과 그 규율의 명확성을 요구한다.
- ④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법률이 있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데 대하여,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다.
- ⑤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법률을 행정권의 발동요건으로 하는데 대하여,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소극적으로 법률에 위반하는 행정작용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다.

2. 행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(行政上의 信賴保護의 原則)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이 원칙은 각 개별법상의 근거규정은 없으나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에서 그 근거를 구한다.
- ② 이 원칙은 현대복지국가 기능과 관계없이 종래의 질서행정 아래서 강조·발전된 원리이다.
- ③ 판례는 이 원칙의 요건으로서 행정청의 선행조치여부는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.
- ④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진행중인 것을 규율하는 부진정 소급효(不真正遡及效)의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이 우선한다고 한다.
- ⑤ 이 원칙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(과잉금지의 원칙)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대상인 사익(私益)이 존속보호 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.

3. 소위 특별행정법관계(특별권력관계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이의 전통적인 이론적 기초는 법규개념에 관한 불침투성이론에 근거하고 있다.
- ② 특별행정법관계에서의 징계권은 특별행정법관계의 배제 및 그 이익의 박탈에 그친다.
- ③ 울레(C.H.Ule)는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누고, 경영수행관계만

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았다.

- ④ 판례는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 한다.
- ⑤ 특별권력관계의 개별적·실질적 구별설은 종래 특별권력관계로 다루어지던 권력관계를 관리관계 내지 일반적인 권력관계로 분해·귀속시키려는 견해이다.

4. 오늘날 개인의 공법상의 권리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다. 다음 중 행정법상

개인의 주관적 권리가 인정되는 기본적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?

- ① 행정법 규정상의 개인의 이익 보호 규정 ② 행정청의 행위의무
- ③ 권리구제의 가능성 ④ 공공복리를 위한 국가역무
- ⑤ 재량권 행사영역의 축소

5. 다음은 행정입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.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현대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회입법의 한계성이 나타남에 따라 행정입법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.
- ② 행정입법권의 확대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입법권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.
- ③ 행정입법의 종류로는 대국민적 구속력을 가지는가의 여부에 따라 크게,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뉜다.
- ④ 행정입법 중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정행위로 된다.
- ⑤ 현대 행정의 유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회입법이 더욱 골격입법화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기도 하다.

6. 다음은 행정입법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들을 설명하고 있다.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입법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,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우에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, 대법원은 그 규정형식의 중요성을 더 감안하여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.
- ② 대통령령은 법령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목적물이 될 수 없으나, 대통령령의 효력이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훼손 기타 이익침해의 효과를 발생케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.
- ③ 위임명령의 근거법이 소멸하면, 이미 이루어진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래에 향해서는 위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위임명령도 무효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견해이다.

- ④ 집행명령의 경우, 근거법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개정법과 성질상 모순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근거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근거법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 발효될 때까지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.
- ⑤ 행정입법이 실질적으로 법규명령으로서의 내용을 가지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, 대법원은 대체로 그 내용을 중시하여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.

7.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체적 구별은 우선 관계법규의 문리적 해석에 의한다.
- ② 요건재량설에 의하면 “하천점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허가를 필요로 한다”고 규정된 경우에는 기속행위로 해석한다.
- ③ “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허가를 받아야 한다”고 규정한 경우에 허가요건을 구비한 신청의 경우에는 기속행위가 된다.
- ④ “.....할 수 있다”고 규정한 경우에도 재량수권(Ermessens-Kann)이 아니라 권한행사의 지시(Kompetenz-Kann)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기속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.
- ⑤ 판단여지설에서는 행정행위의 요건에 관하여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개념으로 보아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.

8.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의 근거법률이 되는 법률상의 요건을 더욱 철저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조치이다.
- ②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견제기능을 발휘하여 재량권을 통제할 수 있다.
- ③ 행정절차 내에서는 절차의 형식성으로 인하여 행정청의 재량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.
- ④ 사법부는 재량권의 일탈·남용을 가리기 위하여 기속행위이건 재량행위이건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.
- ⑤ 재량권의 일탈·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가능성은 행정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다.

9. 다음 중 행정재량에 관한 여러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효과재량설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법규상 어느 정도 기속되는가에 따라 재량행위 여부를 판단한다.
- ② 행정재량은 법규정의 요건 부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판단여지론의 배경이 된다.
- ③ 기속재량이라는 개념은 법적요건의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는 입장이다.
- ④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.

- ⑤ “.....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”는 규정에는 선택재량만이 존재한다.

10. 다음은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구제를 설명하고 있다.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복효적 행정행위라 함은, 당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이 되는 처분이 제3자에게는 반대로 불이익 또는 이익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.
- ② 과거에는, 행정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사실상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었다.
- ③ 오늘날 복효적 행정행위에 있어 제3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당해 처분 또는 부작위를 행정쟁송의 절차로써 다룰 수 있게 되었다.
- ④ 복효적 행정행위가 소송상 문제가 되는 영역은 주로 경업자 소송이나 지역주민간의 소송 등이다.
- ⑤ 그러나,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는 경업자 또는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·허가 등에 대한 제3자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.

11. 다음 중 행정작용의 효력과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?

- ① 공정력은 행정법관계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도 발생한다.
- ② 행정처분의 불가쟁력은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해 다투고자하는 때에도 무관하지 않다.
- ③ 경미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.
- ④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.
- ⑤ 현행 제도상 행정상 입법에 대해서는 추상적 규범통제가 가능하다.

12. 다음 판결의 내용과 관계없는 것은?

“행정지침에 불과한 규정에 의해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국민주택특별분양을 거부한 경우, 동 거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.” (대판 1997.3.14 선고 96누 19079)

- ① 행정지침의 대세적 효력 부인
- ② 공법상의 분양신청권 발생여부
- ③ 거부의사표시의 행정처분성
- ④ 항고소송의 제기요건
- ⑤ 일반처분의 개념

13. A구청장 갑은 생계자금지급조례에 의거 을에게 월 30만원의 생계자금을 지급하면서 관할구역내 산불감시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. 갑의 조치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서 거리가 가장 먼 것은?

- ① 을에 대한 생계자금지급행위는 부담부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.

- ② 을은 산불감시활동에 관한 갑의 지시만을 대상으로 권리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.
- ③ 을에 대한 생계자금지급행위는 기속적 행위이기 때문에 산불감시활동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다.
- ④ 생계자금지급조례에 근거한 생계자금의 지급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.
- ⑤ 생계자금지급과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 시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.

14. 다음 중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대법원은 공법상 부당이득청구권을 공법상 권리로 파악하면서도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진다는 입장이다.
- ②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.
- ③ 연금수령자격이 없는 자가 수령한 연금은 공법상 부당이득에 해당된다.
- ④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은 공법상 부당이득이다.
- ⑤ 개인의 공법상 부당이득도 성립될 수 있다.

15. 판례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의 승계를 부인한 경우는?

- ① 압류와 공매처분
- ② 독촉과 가산금징수처분
- ③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처분
- ④ 대집행의 계고와 대집행실행
- ⑤ 안경사국가시험의 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

16.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(行政行爲의 瑕疵의 治癒)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치유의 대상인 흠은 취소할 수 있는 형식상 및 내용상의 하자이다.
- ② 치유의 효과는 소급적이며,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- ③ 행정행위의 위법성의 판단은 처분시의 사실상태 및 법상태를 기초로 한다.
- ④ 법률이 사전에 청문이나 이유제시를 강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치유를 인정할 수 없다.
- ⑤ 소급효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 일정한 행정행위를 완전히 적법하게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치유의 문제는 아니다.

17. 행정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지정은 일반처분적 성질의 행정계획이다.
- ② 행정계획의 수권규범은 '목적-수단'에 대하여 정하는 목적 프로그램이란 점이 특색이다.
- ③ 법률변경의 효력이 과거의 사실에도 미치는 진정소급효(真正遡及效)의 경우에는 계획존속청구권이 허용된다.
- ④ 집중효(集中效)란 일단 하나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

각종의 관계법령에 의한 인·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의미한다.

- ⑤ 판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행한 택지공급방법의 결정은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.

18.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통고처분이라 함은 일정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이다.
② 통고처분권자는 검찰청 검사이다.
③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, 통고처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④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⑤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임의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, 언제든지 통고처분의 위법을 다룰 수 있다.

19.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대집행의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.
② 대집행의 대상은 행정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한다.
③ 대집행의 요건은 계고할 때 이미 충족되어야 한다.
④ 대집행권자는 처분청 및 상급감독청이다.
⑤ 계고행위도 처분이다.

20. 학설과 판례에 따를 때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나대지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받아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장기간 경과하게 되면 나대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.
② 도시지역이 넓어지면서 논농사를 더 이상 짓기 어렵게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으로 묶여 있는 경우에도 재산권의 침해는 있게 된다.
③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아직도 존치되고 있는 제도이다.
④ 손실보상제도는 국가의 공공사업시행이 확대되면서 그 적용영역이 넓어지게 된 제도이다.
⑤ 오늘날 독일에서는 기본법 제14조 제3항(수용보상)에서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찾고 있다.

21. 신고의 법적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신고에 대한 행정의 대응을 접수와 수리로 분리하여 설명하는 이론도 대두하고 있다.
②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수리의무가 인정된다.
③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

고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.

- ④ 신고제도는 규제완화이후 그 이용이 축소되고 있다.
- ⑤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여도 신고의 법적 효력은 발생한다.

22.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배상책임요건과 관련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?

- ① 공무원의 직무에는 비권력작용도 포함된다.
- ② 경찰관의 부작위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되어 위법하게 된다.
- ③ 배상책임요건인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자도 포함되는데, 그 공무의 위탁에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것도 포함된다.
- ④ 직무행위의 판단기준은 행위자인 공무원의 직무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한다.
- 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한 허위의 인감증명발급과 같은 손해발생의 원인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직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.

23.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이다.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권력행위로서의 공정력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② 사인의 공법행위는 결국 공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법행위와 구별된다.
- ③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인의 지위와 행위의 효과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,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률적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통칙적인 규정은 없다.
- ④ 사인의 공법행위로는 대표적으로 인·허가의 신청행위 등을 들 수 있다.
- ⑤ 사인의 공법행위도 공법행위이므로 민법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.

24.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상 손해배상은 위법-유책의 공무집행시에 발생한다.
- ② 수용유사침해는 독일의 희생보상청구권 법리를 배경으로 한다.
- ③ 수용적 침해란 그 자체로는 적법한 행정작용의 부수적 결과로서 의도되지 않았으나 전형적인 침해를 말한다.
- ④ 손실보상 근거규정을 결한 공용수용 행위시에는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도 성립될 수 있다.
- ⑤ 행정상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손해전보제도이다.

25. 甲과 乙은 각기 A군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, 乙만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. 甲은 A군의 조치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. 이 사안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법리와 거리가 먼 것은?

- ① 하천점용허가는 특허행위이다.
- ② 하천점용허가는 법규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행해져야 할 상대적 금지행위의 해제처분이다.
- ③ 갑의 불복은 경업자쟁송에 속한다.
- ④ 하천점용행위는 공물의 일반사용에 속하지 않는다.
- ⑤ 하천점용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되고,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.

26.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고충처리기관은 진정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.
- ② 일반행정심판은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절차이다.
- ③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는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.
- ④ 행정처분의 부존재는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이다.
- 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른 기관이다.

27.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현행 행정심판제도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.
- ② 행정심판절차는 행정의 자체 통제제도라는 점에서 행정절차의 범주에 속한다.
- ③ 행정심판 청구인적격 판단에 있어서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에 관한 법리가 깊이 연관된다.
- ④ 행정소송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이행을 요구하는 심판청구가 가능하다.
- ⑤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불가쟁력제도가 있다.

28. 의무이행재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처분재결은 형성재결로서 의무이행재결에 속한다.
- ② 처분명령재결도 가능하다.
- ③ 부작위에 대해 의무이행심판의 제기가 가능하다.
- ④ 심판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다.
- 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최상급 상급행정기관이다.

29. 판례에 따를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항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원칙적으로 각하하여야 한다.
- ② 건축사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그를 기초로 법률에서 가중하여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.
- ③ 치과의사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새로운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.

34.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.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물의 자유사용 관계는 공공용물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인정되고, 공용물과 보존공물에 대하여는 공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이다.
- ② 공물사용의 허가는 일반허가와 달리 실체법적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.
- ③ 공물사용권의 특허는 상대방의 출원에 의하여 관리청이 부여하는 것으로서, 그 성질을 쌍방적 행정행위로 보는 입장이 다수설이자 판례의 견해이기도 하다.
- ④ 공물사용권은 공물관리자의 특허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자연공물의 경우에는 지방적 관습에 의하여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.
- ⑤ 공물사용관계 중 권리성이 가장 두드러진 경우는 특허사용 관계라고 할 수 있다.

35. 경찰상의 판단의 여지와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?

- ① 감독기관에 보고할 것인지의 여부 ② 어떤 종류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
- ③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지의 여부 ④ 위험이 존재하는지의 여부
- ⑤ 누구에 대하여 발동할 것인지의 여부

36.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(行政官廳의 權限의 委任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위임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.
- ② 위임은 반드시 법령의 명시적 근거를 요한다.
- ③ 권한위임이 행해지면 항고소송의 피고는 수임기관이다.
- ④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위임은 인정되지 않는다.
- ⑤ 수임자가 다른 행정기관이거나 인격을 달리하는 때에도 위임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모두 이양되므로 위임에 따른 비용도 수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.

37. 지방자치법상 조례제정권(條例制定權)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판례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권의 범위 밖이라고 한다.
- ② 조례는 일정한 범위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관해서 규정할 수 있다.
- ③ 조례는 보통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만, 법규 아닌 행정규칙적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다.
- ④ 판례는 조례에 관한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.
- ⑤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환부거부에 대하여 지방의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조례안은 확정된다.

38.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?

- ① 공용환지 ② 공용사용 ③ 부담제한 ④ 공물제한 ⑤ 사용제한